기자들의 눈

ijournalist.co.kr

2023년 9월 7일 (목)

일간 인터넷판 제125호 TEL 032-433-8081

인천시, '음식물처리 환경정책' 우수한 성적은 진행형

환경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 선정' 눈길
우수한 성과사례, '비하인드' 방해도 심했다
공동주택 음식물 대형감량기 전국 확산 필요

환경부에서는 매년 한국폐기물협회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인천은 수도권매립지가 존재하는 고장으로 수도권의 각종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그만큼 환경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은 음식쓰레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형감량기기 처리기와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을 성공시켰다.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는 2023년도 전국 자치단체 환경정책을 평가했다. 우수기관으로 인천 부평구를 선정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5월 1차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환경부 환경정책과 부합된 결과는 부평구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주택은 다가구가 모여 하루에는 엄청난 음식물류 폐기물이 나오는 현장이다.

인천시 환경정책은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절차를 걸쳐야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단지에 음식물 대형감량기기 처리기를 설치함으로 도로상 흘려지는 오염물 등 냄새를 일거에 해소를 시켰다. 부평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타 기초단체 또한 가정용 감량기를 도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데 발을 맞추었다. 현저히 줄어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향후 대응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됐다.

부평구 환경개선 사업은 환경부, 인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중점사업과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시가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가정용 감량기 보급을 시행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사업은 시민 만족도에서 삶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대형감량기기로 70% 음식 폐기물을 줄인 것이다.

특히 처리기 장점은 발생이 되는 음식물 부산물을 전량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대형감량기로 약 155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감량기 음식물 감량 수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인천 곳곳과 전국 확산 행정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퇴비가 되고 환경을 지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그간 149대의 공동주택 대형감량기를 보급했다. 그중 부평구가 전체의 60% 수준인 91대를 설치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에서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초기에는 공간차지, 악취 우려 등으로 보급이 쉽지 않았다. 첫 시행 단계에는 환경부 내 부지침과 인천시가 알고 있는 규정과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다. 신속 해결하는 행정도 돋보였다. 즉시 수정을 거듭해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보급된 대형감량기 진가를 극대화를 시켰다. 공동주택 주민과 시민들은 감량기 설치

인천 공동주택 등 설치된 대형 음식물처리기기

후 깨끗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깨끗한 단지로 변모시키는 것과 동시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경우도 눈길을 끈다. 총 1만744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해 음식물 부패처리 감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 환경국은 "군·구와 협력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더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인천경제청, '개인 유튜버 허위사실' 법적 대응

허위사실 유포죄, 진실이 아니면 위법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공무원이 관련된 최근 해외 출장의 B 뉴스 기사와 관련해 개인 유튜브도 인용해 방송함으로 인천경제청 공식 입장은 시민들께서 허위사실에 현혹이 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활동하는 개인 유튜브는 B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방송했다. 개인 방송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국민알권리는 범위가 넓어 의견 개진은 비교적 자유롭다. 사실관계가 허위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인천경제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 면책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장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출장길에 대해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허위사실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했다.

개인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무관해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 방송은 현행법상 개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언중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다. 인천경제청에는 진실과 다툼이기에 적극 법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의 신뢰성과 맞물려 있기에 해당 동영상은 기사로 보고 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 방송은 사견이기에 언론활동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개인이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개인 의견일 뿐이다. 개인 주장은 신뢰성 문제가 대두된다. 다만 시청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은 자유다. 이런 맹점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폐단으로 언론의 사명감하고는 결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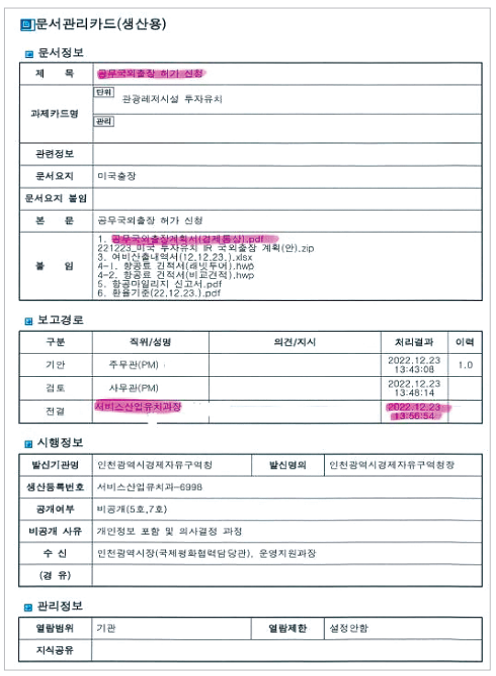
최근 B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A 유튜브는 공익에 유익한 심층 보도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냈다. 언론 또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천경제청은 B 언론사 기사를 문제 삼았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기자가 사전조사의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B 뉴스 측은 8월 24일과 26일 기존 언론 보도에 대한 두 차례 정정 보도를 통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최종 출장 보고서의 존재가 오리무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본 출장 보고서에는 비공개 협약(NDA)이 체결된 해외 잠재투자사의 정보 및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공개하지 못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기관(국회 및 시의회)에는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도 상세히 출장 문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근거는 무엇이고 이해충돌은 없는지 잘 가려야 했다. 기자가 쓰는 것은 자유지만 첫걸음은 펙트 체크다.

실제 공론화가 된 순간 허위라면 복잡해진다. 정정보도와 삭제된 기사의 내용이 방송됨으로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언론사 정정보도가 나온 순간부터 공익적 목적은 이미 벗어난 오보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보안을 유지하는 문건은 기자라고 해도 공개 불허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때론 의혹 보도가 나온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몫이다. 사실로 확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가 현장을 본 것은 아니면 '카더라'가 실제 공론화가 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을 몰고 오는 일이 벌어진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산하 공익관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칫 신뢰성이 추락하는 순간 인천경제청장도 경질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유치과장과 대화 결과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출장·출발 이틀 전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본 출장을 준비한 팀장에게 격노했다"는 주장 또한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본 출장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경제청 반박문에서 밝히고 있다. 2022년 12월 23일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을 결재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문서관리카드(생산용)

문서정보

제 목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과제카드명	단위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 / 관리
관련정보	
문서요지	미국출장
문서요지 붙임	
본 문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붙 임	1.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결재용상).pdf 221223_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계획(안).zip 3. 여비산출내역서(12.12.23.).xlsx 4-1. 항공료 견적서(해외투어).hwp 4-2. 항공료 견적서(비즈건적).hwp 5. 항공마일리지 신고서.pdf 6. 항월기준(22.12.23.).pdf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처리결과	이력
기안	주무관(PM)		2022.12.23 13:43:08	1.0
검토	사무관(PM)		2022.12.23 13:48:14	
전결	서비스산업유치과장		2022.12.23 13:5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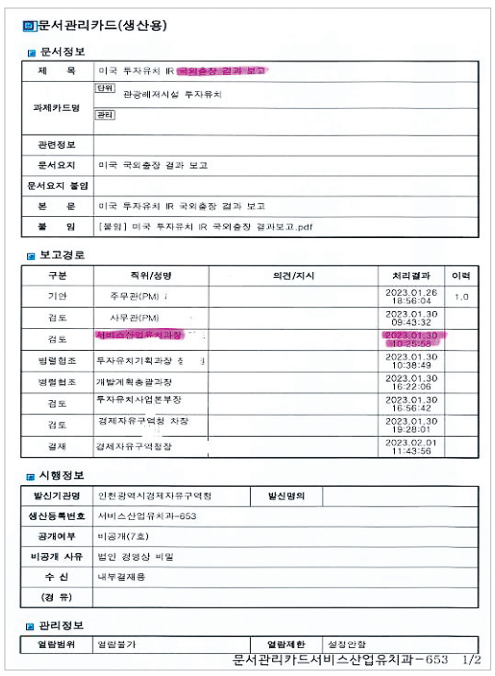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발신명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생산등록번호	서비스산업유치과-6998		
공개여부	비공개(5호,7호)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포함 및 의사결정 과정		
수 신	인천광역시장(국제평화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경 유)			

관리정보

열람범위	기관	열람제한	설정안함
지식공유			

△공무국회출장 허가 신청 문서정보


문서관리카드(생산용)

문서정보

제 목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
과제카드명	단위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 / 관리
관련정보	
문서요지	미국 국외출장 결과 보고
문서요지 붙임	
본 문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
붙 임	[붙임]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보고.pdf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처리결과	이력
기안	주무관(PM)		2023.01.26 18:56:04	1.0
검토	사무관(PM)		2023.01.30 09:43:32	
검토	서비스산업유치과장		2023.01.30 10:25:55	
병렬협조	투자유치기획과장		2023.01.30 10:38:49	
병렬협조	개발계획총괄과장		2023.01.30 16:22:06	
검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23.01.30 16:56:42	
검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2023.01.30 19:28:01	
결재	경제자유구역청장		2023.02.01 11:43:56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발신명의	
생산등록번호	서비스산업유치과-653		
공개여부	비공개(7호)		
비공개 사유	법인 경영상 비밀		
수 신	내부결재용		
(경 유)			

관리정보

열람범위	열람불가	열람제한	설정안함

문서관리카드서비스산업유치과-653 1/2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 문서정보

김대중 시의원은 출장 보고서 외 출장 관련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요청한 바가 없다. 기타 시의원 및 국회의원이 요청한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기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당 유튜버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민·형사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인천경제청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개한 문서는 '공무국회출장허가신청문서정보' 등 2건이다. 수사기관으로 고소한 기자에 대해 결과와 개인 유튜브 방송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최재윤 기자